

“안전교육 통해 시민의식 정착 유도”

‘개정 도로교통법’ 이대로 관철나

(4) 전문가 제언

교통약자 자전거 안전모 지원 등 방안 절실 시내버스 안전벨트 설치 등 대안 마련해야

자전거 안전모 의무화 등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대해 전문가들은 강제성을 띠기보다 시민을 대상으로 안전교육 등을 실시해 시민의식 정착을 유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시내버스의 경우 교통사고 위험이 잠재된 만큼 안전띠 설치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 박정관 교수는 11일 자전거 안전모 착용에 대한 법안에 공감하면서도 강제성을 띠기보다 교육을 통해 시민의식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안전모를 착용할 경우와 착용을 하지 않을 경우 치사율은 4배 가량 차이가 난다”면서 “전남은 고령화사회로 자전거 이용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꾸준한 안전교육을 통한 정착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자전거 음주단속에 대해 그는 “자전거 뿐 아니라 음주사고는 매년 늘고 있다”면서 “음주단속 시 자전거전용도로 등을 병행하면서 단속규정 매뉴얼을 개선해 나가는 방안을 제안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자전거 시민단체와 경찰 관계자들도 법안에 공감하면서도 이를 정착할 수 있는 지자체 지원 등을 제안했다.

전남경찰청 교통안전계 소속 정형우 경위는 “전남은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으며, 농어촌 지역의 경우 자전거 이용률이 높다”면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자전거 안전교육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어르신 등 교통약자나 취약계층에 대해 자전거 안전모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세훈 한국자전거단체 광주연합회장은 “시민들이 자전거 안전모의 중요성을 잘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며 “훈시 규정이기 때문에 법을 지켜야 한다는 인식이 부족하다. 시민대상 안전교육을 통해 법안을 정착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 예코바이크 김광훈 사무국장은

“자전거 안전모 가격이 자전거보다 더 비싸다. 배보다 배꼽이 큰 꼴이다”며 “이에 비해 생활 속에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연령층은 노인들이 많은데 지자체에서 지원책방안을 마련하고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시내버스를 비롯한 자동차 좌석 안전띠 착용에 대해 전문가들은 안전벨트 착용 대상차량에서 제외된 시내버스에도 예외없이 포함시키고 상업용 차량에는 카시트를 착용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 박정관 교수는 “안전벨트가 없어 단속대상에서 빠진 시내버스에도 벨트를 설치해 승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영업용 차량에는 카시트를 설치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
/이나라기자

“학생·교실 중심 교육혁신 시동”

장석웅 전남교육감, ‘취임 100일’ 간담회

전남도교육청이 학생과 교실 중심 혁신을 본격화한다.

장석웅 전남도교육감은 11일 ‘취임 100일’ 간담회에서 “새로 무엇을 시작하기보다 교육의 본질에서 벗어난 일을 하나하나 덜어내고, 학생과 교실 중심의 교육행정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학교가 학생교육과 교실 개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학교 지원중심으로 조직개편을 연내에 완성하겠다”며 “도교육청은 기획·평가 등 정책중심 조직으로 축소하고, 인여인원을 시·군 교육지원청(가칭)학교교육지원센터에 배치해 학교를 직접 지원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장 교육감은 이어 “도민은 도교육청 및 지역별 교육참여위원회를 통해 전남교육 정책방향 수립 및 주민추천교육장 공모제·주민참여예산제·마을교육공동체 운영 등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석웅은 “수직적이고 관료적인 조직문화를 수평·민주적 협력문화로 바꾸려고 교육감이 먼저 권한을 나누고 낮추고 노력했다”며 학교운영비 증액지원과 교단환경 개선비 학교배부 등 일선학교 권한강화를 핵심성공로 꼽았다.

장 교육감은 “전남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래인재 육성에 있다”며 “자율과 배려의 바른 인성과 성숙한 민주주의를 체현하는 학교가 되도록 모든 교육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장 교육감은 “문화·예술·과학·체육 등 다양한 영역에서 ‘미래도전 프로젝트’를 지원, 전남 아이들이 미래사회 주인공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고광민 기자〉

광주교육청, 현장 지원중심 조직개편 단행

시민 담당관 설치...내년 시행

광주시교육청이 학교현장 지원 중심 행정체제로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11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감 직속 ‘시민참여담당관 설치’와 ‘정책국 신설’을 주요 골자로 하는 조직개편안을 확정하고 내년 3월 1일자로 시행한다. 이번 조직개편은 학생 생활교육과 교권보호 관련 업무 확대·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또 계약제교원 인력 채용 및 학교회계 업무 지원강화, 재배치 학교 행정인력 확대 등 학교 현장지원이 필요한 조직 및 업무 체계로 조정할 것이 특징이다. 본청은 현재 ‘1담당관 2관 2국 10과 57담당’의 조직을, ‘2담당관 1관 3국 13과 58담당’으로 재편한다. 특히 교육청과 시민사회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교육협치를 위해 교육감 직속으로 ‘시민참여담당관’을 설치한다. 신설되는 정책국은 기존 정책기획관이 전환된 정책기획과·노사협력과·안전총괄과를 신설한다.

정책국 신설과 함께 교육국과 행정국 업무도 조정된다. 교육국은 학교급별 특수성에 따라 효율적으로 학교지



사랑나눔 고희잔치 11일 오전 광주 JS웨딩컨벤션에서 열린 서구 ‘2018년 하반기 희망플러스 사랑나눔 고희(古稀)잔치’에서 빛고을전문문화예술단이 축하공연을 하고 있다. /김태규 기자

원을 할 수 있도록 유아·특수·초등·중등과정 중심 부서를 설치한다. 민주 시민교육과도 설치해 남북교류·평화 통일 교육을 중점 추진한다. 또, 총무과가 교원 및 지방공무원 공개채용 등 고시업무를 통합해 담당한다. 재정지원과는 재정복지과로 명칭을 변경해 급

식과 저소득층 자녀 학비·급식비 지원 업무를 맡게 된다. 교육지원청엔 생활교육과 교권보호 업무를 추진할 전담 부서를 설치해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교육청은 관련 조례 개정안을 오는 11월 시의회 정례회에 제출한다.

김추근 시교육청 조직법무팀 사무관은 “이번 개편안 시행으로 교육청이 더욱 효과적으로 학교현장을 지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각 기관별 권한과 책임의 적절한 부여로 조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광민 기자〉

‘스쿨 미투’ 교사 16명 또 수사 선상

전수조사 통해 성폭력 혐의 교사 적발

지난달 SNS(사회관계망서비스)을 통해 광주지역 한 사립고 교사들의 성폭력 행위가 불거지면서 가해자로 지목된 교사 16명이 무더기로 경찰수사를 받게 됐다.

11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A고교 현직교사 15명과 전 기간제교사 1명 등 모두 16명을 성폭력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시교육청은 전수조사에서 39명 교사가 성폭력 가해교사로 지목됐으나, 학생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혐의점이 의

심되는 교사만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경찰로부터 수사개시 통보를 받으면 해당 교사들은 직위에서 해제된다.

A고교 학생들은 이들 교사들이 신체 접촉과 성희롱 등의 성폭력을 휘둘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관련내용을 인지하고 전교생 952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으며, 안정화지원단과 실무추진반을 편성, 교육과정 운영을 돕기로 했다.

〈고광민 기자〉

노상방노도 모자라 주먹질



○...이웃집 때문에 소변을 보는 것도 모자라 이를 말리던 집주인에게 주먹을 휘두른 40대가 경찰서 행.

○...11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김모씨(41)는 지난 10일 저녁 9시 15분께 술에 취해 서구 풍암동 자신의 이웃인 조 모씨(63·여) 집 대

문에 노상방노하는 것을 귀가 중이던 조씨가 제지하자 다짜고짜 폭력을 행사한 것.

○...이를 조사하던 경찰은 “바로 옆이 본인 집인데 왜 이웃집 때문에 소변을 봤다”며 “이웃간에 벌어진 사소한 사건일지라도 노상방노에 폭행까지 저질렀으니 엄벌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일침. /김종찬 기자

광양시 중동, 근린상가, 회사 사정상 **급매**합니다.

- 광양시 중동 1888-1번지 (중동 락희호텔 근처)
- 6층중 4층 전체(401호) 2012년 신축
- 210평 (실평 147평),코너, 전망최고
- 모든 업종 오픈가능
- 감정/시세 - 14억
- 급매 - 8억 8천만원 (일시불 완불시 대폭조정가)
- 문의. 010-6834-7400

